

계엄군 저격수 “목 조준해 사격”...그들은 ‘인간 사냥’을 했다

5·18 진상조사위 1년 활동 중간보고
가해 군인 “조준경 부착” 첫 증언
계엄군 200여명 증언 확보
11공수 4개팀 시신 수습도 확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저격수로 활동한 계엄군이 시민의 목을 조준해 직접 저격했다는 증언이 최초로 나왔다. 그동안 계엄군의 저격수의 활용이나 조준경으로 조준사격 했다는 증거들은 제시 됐지만, 직접 저격수로 활동해 총을 쏘았다는 증언은 처음이다.

12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1년 동안 활동내용을 중간보고하는 자리에서 5·18당시 저격수로 활동한 계엄군이 증언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증언을 한 계엄군은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후 재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차륜형 장갑차(APC)위에서 녹색바탕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운동복을 입고 태극기를 휘두르는 청년의 목을 조준경으로 조준해 직접 쏘았다’고 밝혔다. 이 계엄군은 당시 전일빌딩 옥상에서 조준을 한 11공수여단 소속으로 확인됐다. 이 영상에는 송암동 학살 당시 ‘어린이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4살 정도의 아이가 사망했다’는 계엄군의 증언도 담겨 있었다.

조사위는 이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제11공수여단 4개 팀이 광주에 다시 내려와 시체 수습에 참여했고, 계엄군의 진압을 목적으로 한 ‘중정작전’과 ‘대침투작전’이 병행 실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광주교도소의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M60기관총을 설치하고, M1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을 살상했다”는 진술도 확인했다.

하지만 조사위가 본격 활동한 지난 1년여 동안 발표명령자와 암매장, 행방불명 등 5·18의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사실적 접근’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사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관총·조준사격을 포함해 광주봉쇄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시신의 실종, 북한 특수군 침투설과 시위대의 무기고 습격 과정의 북한군 개입 등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시된 11개 법정과제 중 조사가 진행 중인 7개 과제의 조사 진행경과를 발표했다. 또 최초 발표 및 집단 발표 책임자와 경위 조사를 비롯한

12개 직권조사 사건과 72건의 신청사건 중 조사 개시를 결정한 34건 등 총 53건(7개 법정과제 포함)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이를 위해 총 9718권 72만61쪽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일빌딩 등 124개 기관 및 사건 현장을 방문 조사했다. 또,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2만353명의 계엄군 중 200여 명의 증언을 확보했다. 향후 당시 계엄군의 10%에 해당하는 2000명 이상의 증언을 확보할 방침이다.

송선태 위원장은 “저격수로 배치돼 시위대를 조준 사격한 병사가 피해자 유가족을 만나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겠다는 뜻을 전해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회공동체가 반복과 갈등, 편협과 왜곡을 극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광주봉쇄작전 중 사망한 이들의 시신 가운데 광주교도소 일원 최소 41구, 주남마을 일원 최소 6구가 확인되지 않았고, 송암동 일원 최소 8구의 시신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수습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가정) ‘사체처리반’ 운용 의혹에 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총상 사망자를 분류할 당시 계엄군의 M16 총상이 아닌 경우는 전부 시민군이 사용한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했는데, M60기관총이나 M1소총에 의한 사망 개연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사위가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제3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 22일 이후 광주교도소의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각각 M60기관총을 설치하고, M1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들을 살상했다. 제11공수여단의 진술도 확보했다.

조사위는 또 “방대한 군 자료를 분석·확인한 결과, 계엄군의 광주진입작전은 소요진압을 목적으로 한 ‘중정작전’과 ‘대침투작전’이 병행 실시됐다”며 “대침투작전의 일환인 수도권 진압 저지선 3단계 구축계획이 시행됐고, 이것이 광주봉쇄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영민(광산갑) 의원은 이날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랜 시간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내 완전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다. 조사위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경기지사(앞줄 오른쪽 세번째)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상암연구소에서 열린 이재명 기자 전국 지지모임 성격의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서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칙대로 하면 원만하고 합당”...이재명 대선 경선 연기론 반대 입장

지지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당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 ‘여권 결집을 통한 정권재창출’이라는 이 지사의 ‘통 큰 결단’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 마포구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 토론회에 참석한 뒤 경선 연기론 질문을 잇달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생활개혁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를 ‘대선 180일 전’에 선출하게 돼 있는 현행 당헌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부 잡음도 없을 것이라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선언 시점에 대해 “아직 최종 판단을 못 했다”며 “최선을 다해 직무에 충실하고 판단은 국민께 맡길 것”이라고 했다. 강성 친문(친 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반이(반 이재명) 정서에 대해선 “결국 국민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며 “당내 문제에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총리 출신 대권주자들을 향해 제기된 부동산 책임론을 두고 정세균 전 총리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며 “전혀 책임이 없다”고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적은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해 기득권, 관료들의 비협조나 저항을 말한 거지, 특정인을 말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전국적 지지모임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세몰이를 시

작했다. ‘민주평화광장’은 발기인 규모만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외곽 조직이다.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교육감들,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내부적으로는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 ‘광장’의 이름과 조직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범식은 코로나19 시국임에도 현장 인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세를 과시했다.

이 지사는 2부 행사인 ‘청년 주거’ 정책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에 저출생, 실업, 청년, 세대 갈등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이라며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평등 격차를 완화하며 공정성을 회복해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라며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을 포함한 기본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5·18 보상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포함하고, 5·18기념재단 운영에 국가 예산 지원 등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에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도 5·18특별법상 정의와 동일하게 맞췄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5·18기념재단은 비유지원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이 가능해진다. 보다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록 기자 kroh@

與 대선경선, 예정대로 39%·상관없다 35%·연기 16.9% 에스티아이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 시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9월에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에스티아이(EST)가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특정주자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당헌·당규에 따라 9월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9.9%를 기록했다. 이어 ‘경선 시기는 상관없다’는 의견이 35.2%, ‘코로나19 상황과 경선 흥행 등을 고려해 경선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16.9%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월에 진행해야 한다’ 41.5%, ‘연기해야 한다’ 23.7%, ‘상관없다’ 27.7%를 각각 기록했다.

여권 대선 주자별 지지층으로 보면 이재명 경기

지사 지지층에서는 ‘9월 진행’ (49.8%)이 ‘연기’ (18.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층은 ‘9월 진행’이 29.8%, ‘연기’는 34.3%였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지지층은 ‘9월 진행’ 38.2%, ‘연기’ 36.1%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붉·노·초의 고장 고흥!